文정부, 新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

지역 인재 키우고 지방 일자리 창출… 수도권 쏠림 해소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 목표
3대 가치로 '분권·포용·혁신' 꼽아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 기획전시장에서 열린 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 참석해 균형발전을 기원하며 태극기 퍼즐의 조각을 맞추는 퍼포먼스 후 파이팅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할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공개됐다.

정부는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목표로 지역인재·일자리 선순환 교육체계,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 지역산업 3대 혁신 등 9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 불균형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잠식 등 그간 심화돼 온 문제점과 함께 저성장·저고용·저출산 및 인구절벽 ·지방소멸에 대한 대응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정했다.

또 4대 복합혁신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지정해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중앙부처, 전문가, 지자체, 지역 주민 등 각계의 의견 수렴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3대 가치로 '분권', '포용', '혁신'을 꼽고 이번 정책과제에 복합적으로 녹여냈다.

이를 위해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혁신 등의 3대 전략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9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주요 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대 의약학 계열의 지역인재·저소득층 선발을 의무화하고, 지방대학 -대학-지자체-공공기관 클러스터를 신설해 맞춤형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문화예술·문화산업·역사전통 등 분야별로 2022년까지 30개의 문화 도시를 지정해 활성화 한다.

또 자살·빈곤·출산율 등 사회보장서비스 취약지역을 특별지원 구역으로 선정·지원해 지역 간 사회보장 격차를 완화하고 24시간 중증외상환자의 응급수술·치료가 가능한 권역외상센터를 2022년까지 17개 센터 개소 완료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뉴딜 및 중소도시 재도약을 위해서는 유휴 산업시설을 활용한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등 지역맞춤형 뉴딜사업을 활성화한다.

지역산업 3대 혁신과제도 추진된다.

지역의 자립적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대표 중견·강소 기업을 육성하고, 사회적경제 5대 분야의 50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역에 머무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지역 거점대학과 산단에 산학융합지구 15개를 조성하고, 지역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인구 비중 50% 이상, 지역 일자리 비중 50% 이상, 5년간 농어촌 인구 순유입 2015년 대비 10% 이상을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선결과제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이 2월 내 마무리 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이후 연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 세부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날 선포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확대는 지역발전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고, 균형발전 정책은 인프라를 토대로 지역발전을 위한 콘텐츠를 입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자치분권 확대와 국가균형발전을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 시도지사 여러분이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더 관심을 두고 힘을 모아달라. 국회를 비롯한 중앙정치권도 설득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지역위 송재호 위원장과 위원, 17개 시·도지사, 13개 부처 장·차관, 유관 기관·기업 및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세종=최신웅 기자 grandtrust@metroseoul.co.kr

與, 4년 중임제 등 개헌 공감대 형성

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통령 4년 중임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개헌 및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동시 국민투표를 진행할 수 있도록 2월에 협상안을 타결하고, 3월 조문을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해졌다. 당초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야당과의 협상 여지가 있는 만큼 결론은 내리지 않았다.

다만,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이 다수 의견이었던 만큼 향후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로 의원총회에서 대다수의 의원들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주 동안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개헌 관련 구두·서면 설문조사와 당원·일반국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왔다.

한편, 의총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민주당은 개헌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개헌안을 전국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겠다는 것은 대선 당시 모든 후보가 이의 없이 약속했으며 국민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면서, 야당을 향해서는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 동시실시를 민주당의 정략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정략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가 이 직무에 대해 태만하지 않으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최소한 각 당이 국민이 생각하는 개헌안에 대한 대안을 가져오고 논의를 해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민이 촛불로 만든 역사에 대한 직무유기를 국회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시기상으로 2월 국회에서 여야가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예정된 개헌 시간표를 지킬 수 없게 된다"면서, "각 당은 늦어도 2월 중순까지 각자 개헌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창원 기자

김성태, 文정부 전분야서 강력 비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사진)는 1일 문재인정부의 정책·안보·외교·적폐청산 등 전분야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들이 다시 묻고 있다. 이것이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고 국민들이 고개를 가로젓고 있다"며 맹공을 펼쳤다.

우선 김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정책에 대해 "화려한 레토릭(수사학)으로만 포장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 포퓰리즘이 감당하기에 현실은 너무도 치열하고 디테일은 여전히 부족하기만 하다"고 지적하면서, "지금이라도 업종별·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정규직 문제 관련해서도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를 포함해 이전 김대중·노무현정부를 싸잡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를 말하기에 앞서 오늘날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심각한 사회적 격차 문제로 제기된 비정규직 문제의 근원은 결국 '김대중-노무현 정부'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의 솔직한 입장표명과 자기고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층 강도 높은 지적을 이어갔다.

그는 가상화폐 시장,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군 복무기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대책 등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앞뒤 안 재고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시작된 문재인 정권의 정책참사는 급기야 갈팡질팡 '결정장애'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창원 기자

"도시공동체, 새로운 형태로 회복시킬 것"

6.13 지방선거 릴레이 인터뷰

② 박승원 • 광명시장 출마선언 /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

시민이 편한 도시설계 형태 이뤄야
문화·예술영역 특화 콘텐츠 산업화

박승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손진영 기자 son@

광명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박승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도시공동체를 새로운 형태로 회복시키려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한 박 의원은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도시설계를 개발전략적인 측면보다는 시민들이 그 지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미래지향적 도시설계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도시재생사업)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큰 돈 들이지 않고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이 정착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승원 광명시장 후보와의 일문일답.

- 광명시장이 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문화·예술영역에 특화된 콘텐츠를 개발해 산업화시키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형태 등을 끊임없이 만들어나가려 한다. 또 도시재생사업 측면에서는 도시공동체를 새로운 형태로 회복시키려 한다. 도시설계를 개발전략적인 측면보다는 시민들이 그 지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 주요 공약인 도시재생사업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광명시 10만평 첨단산업단지에 최첨단 분야의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8만평의 주거단지에 청년주거단지를 조성해 이른바 'N포세대'라고 하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등을 포함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우려 한다. 다만, 도시재생사업은 이전처럼 '빨리빨리·보여주기식'으로 하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큰 돈들이지 않고 특색있는 도시를 만들어 시민들이 정착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아이디어가 있나

▲시민들이 정치와 행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모르고, 창구 또한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광명커뮤니티 안에 문화·예술·평생교육 커뮤니티 등을 만들고, 유관 단체나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구축하려고 한다.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가면 보다 좋고 다양한 콘텐츠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힘을 모으는 것이 시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靑 문건유출' 정호성, 2심도 징역 1년6개월

신뢰 훼손·조사 불응… 항소 기각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사진)이 2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일 정 전 비서관에 대해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단초를 제공해 공무 및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전달했다는 공무상 비밀 47건 중 33건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찰 측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33개 문건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 판단했다. 이들 문건은 최씨가 소유한 미승빌딩에서 발견된 외장 하드디스크에 들어있었다. 검찰은 수사 초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한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해당 디스크를 압수했다가 문건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정보 출력물은 청와대 행정관 자료와 대통령 일정 관련 자료, 외교관계 자료들로, 영장에 기재된 미르·K스포츠재단 기부물품을 모집한 것에 대한 직·간접적 증거로 볼 수 없는 사안"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렸다. 1998년 박 전 대통령의 정치 입문 시기부터 함께 활동해왔다.

그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최씨 측에 청와대·정부 문서 180여건을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12월 국정농단 의혹 해소를 위해 열린 국회 청문회에도 불출석한 혐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도 있다.

최씨에 넘겨진 문건 가운데에는 '국무회의 말씀자료'와 '드레스덴 연설문' 등 일반에 공개돼선 안 되는 공무상 비밀도 들어있었다.

/이범종 기자 joker@